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제18권(인문·사회과학편) 제1호 pp.1~16. 1987.  
 UOU Report Vol.18.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o.1. pp.1~16. 1987.  
 University of Ulsan.

## 사회주의 국가 헌법의 구조와 특징

도 회 군  
 행정학과  
 (1986. 9. 30 접수)

### 〈요 약〉

자본주의국가와 다른 이론과 과정을 통하여 성립된 사회주의국가헌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으로서 갖는 일반적 특징으로서는 첫째, 이념성, 둘째, 최고규범성, 셋째, 규율대상성의 광범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헌법의 구조와 체계속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을 보면, 기본원리면에서는 국가권력의 계급성,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당의 지도적 지위, 사회주의적 경제질서, 평화공존 및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칙 등을 들 수 있고, 기본권편에서는 권리의 실질적 보장 추구, 권리와 의무의 결합, 권리·의무주체의 계급성, 기본권의 상대화 등을, 통치구조편에서는 소비에트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통합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또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는 전국적 토론이 행하여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ocialist States

Do, Hoe-Ku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Received September 30, 1986)

### 〈Résumé〉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ocialist states are as follows. General characteristics as constitution are ideological nature, supreme norm in the state, and broadness of area to be regulated.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shown in each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s are as follows: class essence of the state power, socialist democracy, leading status of the communist party, socialist economic structure, peaceful coexistence and socialist internationalism in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s; substantial guarantee of rights, linkage of rights and duties, class nature of the enjoyers of rights and duties and relativization of basic rights in the basic rights structure; integration of powers in the structure of government; and the nation-wide discussion at adoption and amendmend of constitutions. Of course, ideology of Marxism-Leninism is the basis of all of these.

### 1. 머 리 말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는 현실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법이론에 있어서도 다름이 없다.

세계 각국의 憲法들을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憲法分類論인데, 최근에 사회경제체제를 기준으로 하여 자본주의국가헌법과 사회주의국가헌법으로 나누는 분류방법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 그럼으로써 사회주의국가헌법들이 자본주의국가헌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17년의 러시아革命 이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전세계 육지면적의 약 26%와 인구의 약 35% 이상이 사회주의국가로 분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비율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 중에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국가들 및 中北, 北韓, 쿠바, 몽고, 베트남, 캄푸치아, 남예멘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소련헌법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국가들의 헌법에 대하여는 관련되는 경우에만 언급하려 한다. 그것은 소련헌법이 이들 국가 헌법들 중 가장 먼저 성립되었고 또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것이며, 나머지는 이 소련헌법을 모방하였거나 그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먼저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 보고 나서, 사회주의국가헌법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지적한 후, 헌법의 구조와 체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 보는 순서를 따른다.<sup>(1)</sup> 이 과정에서 基本權의 구조와 統治構造에 대하여는 이 논문의 주제상 그 특징만을 살펴보는 데 그칠 것이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II. 사회주의국가의 憲法理論

### 1. 憲法觀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인식하는 점에서는 사회주의국가나 자본주의국가나 차이가 없다.<sup>(2)</sup> 또한 일찌기 레닌도 지적한 바 있지만<sup>(3)</sup> 헌법을 법적 의미(de jure constitution)와 사실적 의미(de facto constitution)의 양 측면에서 아울러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sup>(4)</sup>에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식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헌법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다.

#### (1) '國家法(state law)' 이론

스탈린에 의하면 헌법이란 '이미 달성하고 확보한 성과들의 등록(registration)이며 그것의 입법적 구현(legislative embodiment)'<sup>(5)</sup>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하면 理想的 基本權이나 계획을 담고 있기보다는 한 국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기술하여 놓은 것이 헌법이라는 것이다.<sup>(6)</sup> 스탈린 시대의 지도적 헌법학자였던 비신스키는 이러한 헌법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소비에트헌법은 소비에트국가가 따라서 걸어온 역사적 경로의 총화를 나타낸다. 동시에 그것은 계속되는 국가생활발전의 입법적 기초이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 헌법의 발전은 소비에트 국가의 발전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치적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는 국가최고권력기관에 의하여 채택되는 소비에트헌법의 그에 상응하는 변화에 반영된다.

소비에트헌법에서 우리는 소비에트국가의 역사적 발전의 각 단계에서 획득된 사회주의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며 법적으로 확인한다."<sup>(7)</sup>

(1) 사회주의국가헌법의 특징들을 이 논문에서처럼 구조별로 살펴보기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오히려 그 특징을 더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특징이 사회주의국가헌법의 구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과 같은 차례에 따라 논의한다.

(2) トボルニン著, 畑中和夫監譯, ソビエト憲法論(京都: 法律文化社, 1980), 2면; V. Chirkin,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Institution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5), p. 236 등 참조.

(3) L. I. Brezhnev, "On the Draft Constitution of the U.S.S.R.," F. J. M. Feldbrugge, ed., *The Constitutions of the USSR and the Union Republics* (Alphen aan den Rijn/Germantown, Maryland: Sijthoff & Noordhoff, 1979), p. 188 참조.

(4) V. Chirkin, *op. cit.*, pp. 11-12; トボルニン, 앞의 책, 2면.

(5) J. N. Hazard, "Foreign Policy and the 1977 Soviet Constitution," *AJIL*, Vol. 72(1978), p. 351.

(6) J. Towster, *Political Power in the USSR 1917-1947*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8), p. 19.

(7) A. Y. Vyshinsky, *The Law of the Soviet State* (New York: Macmillan, 1954), p. 87.

이와 같은 헌법관은 프로그램과 헌법을 구별한다. 스탈린에 의하면, 프로그램은 아직 없으며, 미래에 획득되고 성취되어야 할 것을 말하지만, 헌법은 현재 존재하며 이미 획득되고 성취된 것을 말한다고 한다.<sup>(8)</sup>

헌법이란 본질적으로 헌법적 언어로써 소비에트체제의 변형을 도식적으로 반영하고 일어난 변화의 공고화를 의도하는 반영적 도구(reflective instrument)라는 헌법관을 '국가법' 이론이라고 한다.<sup>(9)</sup> 이 헌법관이 스탈린시대의 주도적 헌법관이었으며, 이에 의하여 제정된 전형적 헌법이 1936년의 스탈린헌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헌법은 끊임없는 수정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생길 때마다 국가구조의 변화를 기록하고 합법화하는 法制化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sup>(10)</sup>

## (2) '憲法(constitutional law)' 이론

국가법이론에 반대하며 헌법은 반영적임과 동시에 프로그램(綱領)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이론이 소련내에서 60년대 초반부터 대두하였는데, 이를 '헌법' 이론이라고 한다. 코톡(V.F. Kotok)은, 국가법이론이 주장하듯이 헌법은 특정한 영역이 없이 각 법분야들의 조직의 반영일 뿐이라고 한다면 헌법의 最高性を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1)</sup> 또 헌법학자들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이 헌법의 規範的潛在力を 경시한 채 단순한 사회정치적 반영으로만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sup>(12)</sup> 나아가 '국가법'이란 명칭도 부적절함을 밝히고 있다.

"첫째, 국가법이란 용어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국내법 전분야를 생각하고, 전문가들은 오직 국내법 중의 한 분야에 한정시켜 생각한다. 따라서 대중과 전문가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둘째, 국가법이란 용어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너무 좁게 이해된다. 헌법은 국가기구나 정부구조 이상의 어떤 것, 즉 국가기관이 아닌 지도적 조직인 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의 모든 권력구조를 의미하며, 사회관계의 다양성을 규율한다. 사회관계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개인의 지위를 반영한다. 사회관계의 광범한 구조는 헌법 자체 속에 법적 형태로 분명히 반영되기 때문이다."<sup>(13)</sup>

소련에서 국가법 이론과 헌법 이론의 논쟁은 1977년 헌법이 前文을 비롯하여 이러곳<sup>(14)</sup>에서 프로그램적 성격을 띤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이론의 2원주의적 입장을 지지하여 헌법 이론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로닌(S. L. Ronin)은 신헌법의 프로그램적 내용을 분석하여, 신헌법은 과거의 업적을 반영할 뿐 아니라 '미래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브레즈네프의 말에 동조하였으며,<sup>(15)</sup> 파페로프(N. P. Farberov)는 소비에트국가법의 반영적 지향성을 강조한 1936년 헌법이 반영적 요소와 프로그램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레닌의 헌법관을 왜곡시켰음을 지적하며, 신헌법은 소련헌법의 비스탈린화를 효과적으로 완수하였고 그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였다고 결론지었다.<sup>(16)</sup>

지금도 소련에서는 국가법 이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들도 헌법의 프로그램적 요소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sup>(17)</sup>

이 헌법 이론은 소련의 신헌법으로 하여금 소련 국민들의 사회정치적·경제적 및 법적 지위, 국가권력과 이에 대응하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의 명확한 상호관련성 및 그 반대의 강우를 더욱 강조하게 하였다는 점에 더 큰 공헌이 있을 것이다.<sup>(18)</sup> 현재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헌법 이론에 입각한 헌법을 가

(8) Ibid.

(9) R. Sharlet, *The New Soviet Constitution of 1977* (Brunswick, Ohio: King's Court Communications, 1978), p. 59, note 17 참조.

(10) Ibid., pp. 8-9.

(11) V. F. Kotok, "Soderzhanie sovetskogo konstitutsionnogo prava," *Sovetskoe Gosudarstvo i pravo* (1971) No. 2, p. 108, J. N. Hazard, "A Constitution for 'Developed Socialism'," D. D. Barry, et al., eds., *Soviet Law after Stalin, Part II*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ordhoff, 1978), p. 12에서 재인용.

(12) R. Sharlet, *op. cit.*, p. 9.

(13) S. I. Rusinova and V. A. Rianzhina, *Sovetskoe Konstitutsionnoe Pravo* (Leningrad: 1975), p. 7, J. N. Hazard, *art. cit.*, p. 12에서 재인용.

(14) § 14, § 15, § 18, § 21, §§ 28-30 등이 그러하다.

(15) R. Sharlet,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the Juridication of the Soviet System," D. R. Kelly,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nev Era* (New York: Praeger, 1980), p. 203.

(16) Ibid.

(17) R. Sharlet, *art. cit.*, p. 205; 新美治一, "社會主義國家の基本法としての社會主義型憲法の意義,"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現代社會主義憲法論* (京都: 法律文化社, 1977), 48-49면 참조.

(18) R. Sharlet, *op. cit.*, p. 9.

지고 있다.

## 2. 헌법발전단계 이론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보통 그 국가의 發展段階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는 共產主義로 향한 각각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헌법도 그에 상응하여 발전한다고 한다. 즉, 사회와 국가가 어떤 발전단계로부터 다른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그 도달점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체제, 국가조직,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를 확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전체의 주요한 목적을 정식화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9)</sup> 사회주의국가들은 실제로 그들의 사회발전이론에 따라 각 단계에 따른 憲法改正을 추진하여 왔다. 사회주의국가헌법의 특이성은 바로 이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은 3단계를 거쳤다고 한다.<sup>(20)</sup>

### (1) 人民民主主義 憲法

이 헌법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사회주의의 기초건설기의 헌법이다. 이 시기에는 비공산주의정당들과 共產黨이 공존하면서 경제면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와 소기업의 사적 경영, 토지개혁을 통한 자작농의 토지소유 등 자본주의적 요소, 그리고 봉건적 농업제도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 이 과도기는 일반적으로 人民民主主義 단계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때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한다.

소련의 1918년 헌법과 1924년 헌법을 비롯하여 동구권의 최초의 헌법들, 1940년의 몽고헌법, 1946년의 북베트남헌법, 1948년의 北韓憲法, 1954년의 中共憲法, 그리고 현재의 1980년 베트남 헌법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sup>(21)</sup>

이 헌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특징을 가진다.<sup>(22)</sup> 첫째, 국가경제의 다층구조성.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소자본가, 지주적 소유제도 및 사적 기업체제가 공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敵對的 階級關係의 존재. 위와 같은 경제구조를 인정한 결과 소자본가, 소지주 등의 평등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sup>(23)</sup> 셋째,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노동자계급이 부르조아지 또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정부를 수립하여 실질적 지도권을 장악하였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위로 향한 사회 전체의 점진적 이진이 시작되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헌법은 그들 나라의 역사적·사회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소유제도나 정치참여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다른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 (2) 社會主義 憲法

이 헌법은 사회주의가 확립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헌법으로서, 자본주의적 착취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계급이 국가의 전권력을 장악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성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헌법이다.<sup>(24)</sup>

소련의 1936년 헌법이 그 최초의 예이며, 1960년 체코슬로바키아헌법, 1965년 루마니아헌법, 1963년 유고슬라비아헌법, 1968년 동독헌법, 1971년 불가리아헌법, 1972년 헝가리헌법, 1974년 북한헌법, 1975년·1978년·1982년의 중공헌법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는 확립된 사회주의 헌법, 성공적인 단계에 도달한 사회주의헌법이라고도 불리며, '발전된 사회주의'(developed socialism) 이론이 나온 이후에는 '발전된 사회

(19) トボルニン, 앞의 책, 1-2면.

(20)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구자들도 이 분류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權寧高, "보체즈베프憲法の 規範과 現實," 法學論文集 제7집(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 64면; 金哲洙, 北韓憲法와 共產主義憲法과의 異同에 關한 研究(국토통일원, 1978), 5-7면; 張明率, "共產主義憲法の 理論과 憲法秩序," 法政論壇 제3집(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80), 151면. 1977년 소련헌법 개정 이전의 분류론에 관하여는 韓雄吉, 比較憲法論(韓國司法行政學會, 1976), 27-32면; 黑田了一, 比較憲法論序說(東京:有斐閣, 1964), 59-60면 참조.

(21) 1976년의 루마니아헌법을 이 범주에 넣는 학자가 있다. V. Chirkin, *op. cit.*, p. 237.

(22) 金哲洙, 앞의 책, 5면; 張明率, 앞의 논문, 151-152면; 韓雄吉, 앞의 책, 28-29면. V. Chirkin, *op. cit.*, pp. 237-238 참조.

(23) 반면, 소련의 1918년 헌법은 착취계급에 대한 참정권 박탈을 규정하는 등 (§ 64, § 65) 사적 지배계급의 권리를 부인하였다.

(24) 佐藤功, 比較政治制度(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6), 241면.

주의 사회 건설기의 헌법' <sup>(25)</sup>이라고도 불린다.

이 헌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특징을 가진다. <sup>(26)</sup> 첫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승리, 자본주의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全人民的 計劃經濟制度의 확립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착취계급의 소멸,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 계급구조가 변화하여 착취계급이 소멸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다. 셋째,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확립,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 인민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전인민의 권력으로의 점진적 변형이 추진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배적 지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시적 변형이었던 전단계의 인민민주주의 단계에 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고한 우위를 선언하고 있다.

### (3) 發展된 社會主義 헌법

이 헌법은 형태를 갖추고 그 자신의 토대에 기하여 발전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주의 건설기에 도달하였을 때,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가 全人民的 社會主義國家로 발전하였을 때 나타나는 헌법이다.

‘발전된 사회주의’의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비교적 낯선 개념이다. 이 용어와 개념은 196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소련과 동구권에서 인정되어 왔다. 그들에 의하면,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는 이전 단계에 비하여 사회주의 발전의 정도가 그 질적인 차이를 과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며, 따라서 사회주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단계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sup>(27)</sup>

이 유형의 헌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1977년의 소련헌법이다. 그밖에 1974년 개정의 동독헌법, 1976년의 폴란드헌법과 알바니아헌법, 1974년 유고슬라비아헌법도 부분적으로 이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것은 아니다. <sup>(28)</sup>

이 헌법의 내용과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sup>(29)</sup> 첫째,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발전, 둘째, 社會的 同質性 및 이에 따른 국가권력의 새로운 성격으로서의 全人民的 國家, 셋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배, 넷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그것이다. 소련의 1977년 헌법은 前文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강력한 생산력과 진보적 과학 및 문화가 창조되고, 인민의 복지가 계속 증진되며, 개인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바람직한 조건들이 제공되는 사회.

—모든 계급과 사회계층들간의 접근, 모든 민족과 국민들의 법적·실제적 평등 및 이들의 우호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인민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인 소비에트 인민이 형성된, 성숙한 사회주의적 사회관계가 성취된 사회.

—애국자이자 국제주의자인 勤勞人民이 고도의 조직역량, 이념성 및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개인을 위한 전체의 배려와 전체를 위한 개인의 배려가 생활의 법칙이 되고 있는 사회.

—정치체제가 모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국가의 생활에 근로인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 및 의무와의 결합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25) V. Chirkin, *op. cit.*, p. 237.

(26) 張明華, 앞의 논문, 152—153면; V. Chirkin, *op. cit.*, p. 238 참조.

(27) 이에 관해서는 安秉永, “蘇聯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北韓, 1977년 11월호; A. B. Evans, Jr., “Developed Socialism in Soviet Ideology,” *Soviet Studies*, Vol. XXIX (July 1977); D. R. Kelly, “Development in Ideology,” D. R. Kelly, ed., *op. cit.*; 그리고, 社會主義國家의 憲法秩序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1984), 24—27면 참조.

(28) 단, 중공은 소련의 발전된 사회주의 이론 및 전인민국가론에 완강한 반론을 포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 중 가장 최근인 1982년에 헌법을 개정한 중공은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 단계에 상응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중공의 비판에 관해서는 R. E. Kanet, “The Rise and Fall of the ‘All-People’s State’,” L. J. Cohen and J. P.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 Y.: Anchor, 1974), pp. 148—154 참조.

(29) V. Chirkin, *op. cit.*, p. 238 참조.

### Ⅲ. 사회주의국가헌법의 一般의 特徵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헌법의 기본적 특징들은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sup>(30)</sup> 예컨대, 헌법의 제급성, 어념성, 최고규범성,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리,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실질적 보장 추구, 평화공존 및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원리, 프로그램성, 권력통합주의 등이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사회주의국가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으로서의 일반적 특징을 먼저 살펴 보고, 다음 장에서 그들 헌법의 구조와 체계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편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따로 살펴 보는 순서를 취하려 한다.

#### 1. 理 念 性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갖는 특징의 하나로 이념성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31)</sup> 이 이념성이란 특징은 사회주의국가헌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의 헌법들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에서 확고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다. (소련헌법 §6, 알바니아헌법 전문, §3, §15, 불가리아헌법 §45, 동독헌법 §1 쿠바헌법 전문, §5, §38,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16, 헝가리헌법 §3, 북한헌법 §4, §6, 중공헌법 전문:이하 약자로 표기)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개별적인 특징들도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된 것이거나 그것의 구체적 적용 또는 실현이라는 점 또한 지적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밖에도 우리가 보통 헌법의 특징으로 들고 있는 歷史性과 政治性이라는 요소<sup>(32)</sup>도 사회주의국가헌법에서는 이 이념성의 요소에 포함시켜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정치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아울러 역사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국가헌법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사회발전의 각 단계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음은 이들 헌법의 역사성이 이념에 기초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2. 最高規範性

헌법은 국가법체제에 있어서 최상위의 법규범이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헌법이 다른 모든 법령들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법령들은 헌법에 일치하도록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개정절차의 난이성, 국가법체제상 헌법의 지위와 헌법 및 법률해석권, 헌법에 대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준수 의무 등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sup>(33)</sup>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헌법개정시에 전국적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부터 헌법이 국민의 진실한 창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헌법의 최고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법령의 헌법적합성을 규정한다든가(동 §89, 체 연방에 관한 헌법적 법률 §142③),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권을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것도(소 §121⑤, 동 §74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4)</sup>

그런데 1977년의 소련 신헌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소련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관하여 아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1924년 헌법에 의하면 부분적이나마 연방대법원이 구성공화국의 입법의 合憲性여부에 관한

(30) Ibid.; J.N. Hazard, et al., *The Soviet Legal System*(N.Y.: Oceana Publications, 1977), p.52; 新美治一, 앞의 논문, 40면 등 참조.

(31) 權寧星, 憲法學原論(法文社, 1986), 18면;  
金哲洙, 憲法學概論(博英社, 1980), 12-13면 등 참조.

(32) 위의 두 및 許營, 憲法理論과 憲法(上)(博英社, 1980), 31-41면 참조.

(33) 新美治一, 앞의 논문, 45-46면.

(34) 위의 논문, 46면.

입법부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나 (§ 43 C), 1936년 헌법에는 그것마저 삭제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방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布告令 또는 정부의 명령 등 하위입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헌법침해와 헌법의 개폐가 빈번히 발생하였다.<sup>(35)</sup>

그러나 스탈린 이후 헌법의 최고규범성 문제는 1977년 헌법에 “소련헌법은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 173)라고 명문화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반면, 위에서 살펴보겠지만 소련헌법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장하는 違憲法令審査制度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3. 規律對象의 廣範性

현재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헌법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율대상의 확대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sup>(36)</sup> 이는 소련의 ‘헌법’이론의 주장이기도 하다.<sup>(37)</sup> 소련의 법학자 이리인스키에 의하면, 사회주의형 헌법은 본래 자본주의형 헌법에 비하여 훨씬 광범한 사회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진행되는 국가와 사회의 점차적 접근은 그 경향을 한층 강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경향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적인 예로서 권력형성의 메카니즘, 권력실현의 메카니즘, 권력발동 및 그 전제의 메카니즘에 사회단체가 등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38)</sup>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가헌법에는 시민과 사회단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과 기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규정한 조항(소 § 7—8, § 48, 동 § 41, § 44, § 61, 체 § 5, 루 § 27, 불 § 10, 헝 § 4, 폴 § 85 등) 등이 그 예이다.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은 전문이 406조나 되는 방대한 규모인데 그 중 1/3이 사회구조와 사회적·정치적 기초에 관한 것이다.

헌법의 규율대상이 확대된 이유로 토포르닌(B. Topornin)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사회의 성과를 정식화한다는 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국가나 비국가형태를 불문하고 발전·확대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黨的 지도적 역할이 높아졌다는 점, 사회주의 경제원칙들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해졌다는 점, 헌법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개인—노동집단—국가—사회’라는 관련에서만 그 현대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면서, 헌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메카니즘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통일적, 전체적, 상호관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며, 공산주의로의 도상에 있는 사회 전체를 그 방향으로 규율한다는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의 조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sup>(39)</sup>

이 특징은 앞으로 살펴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요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4. 拘束的 規範性 여부

이상과 같은 특징 외에도 拘束的 規範性(예컨대 동독헌법 § 105는 “헌법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와 實効性의 확보 및 保障性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40)</sup>

여기서는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이론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헌법의 프로그램(綱領)적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의 시마이로바는 사회주의국가헌법의 프로그램 규정과 자본주의국가헌법의 그것은 다르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국가헌법의 프로그램 규정을 ‘장래를 전향하고, 全社會的 의의를

(35) 1966년에는 헌법의 최고소비에트 정령조항 (§ 35)을 변경하는 법률이 먼저 공포되고, 이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최고소비에트에서 그 헌법개정을 인준하였다. 1946년, 헌법상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의 피선거연령조항 (§ 135)을 개정하는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포고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최고소비에트에서 위 포고령에 의한 헌법개정을 인정하였다. 1940년에는 헌법의 무상교육조항 (§ 121)에 위배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수업료징수에 관한 연방정부의 명령이 오랫동안 시행된 후,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J.N. Hazard, et al., *op. cit.*, pp. 49—50; J.N. Hazard, “Constitutions and Revolutionary Socialism,” H.S. Commager, et al., Hrsg., *Festschrift für Karl Loewenstein* (Tübingen: J.C.B. Mohr, 1971), S. 196f; A.L. Unger,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USSR* (London: Methuen, 1981), pp. 162—168.

(36) 토포르닌, 앞의 책, 28—29면; 新美治一, 앞의 논문, 51—54면 참조.

(37) 앞의 주 (13) 참조.

(38) 이리인스키, “사회주의적 헌법주의의 민주적 기초의 발전,” 소련과학아카데미 국가·법연구소원, 발간된 사회주의건설기의 국가와 민주주의(1974), 74면 이하, 新美治一, 앞의 논문, 52면에서 인용.

(39) 토포르닌, 앞의 책, 29—30면.

(40) 新美治一, 앞의 논문, 40면.

가지며, 사회, 국가, 사회단체 및 개인의 발전방향, 기본적 과제 및 목적을 정한 규정이라고 정의하고, 그 특징으로서 첫째, 장래를 전망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 둘째, 그 장래의 전망에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시민의 활동이 규정된다는 점, 셋째, 장래의 전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회 및 국가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이며, 이 규정은 당연히 전사회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 넷째, 이 규정은 헌법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41)</sup> 그리고 이 프로그램규정의 규범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소련에서는 대체로 이리인스키의 다음과 같은 설명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규정은 좁은 의미에서는 법규범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책의 지침이며, 법규범의 해석 및 적용의 지침이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의 프로그램규정의 지시, 목적, 과제에 비추어 적합한가 여부로써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름으로 시정, 배제, 취소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하여진다는 점에 의하여 명확해진다.”<sup>(42)</sup>

그러나 헌법의 구속적 규범성에 관해서는 굳이 사회주의국가헌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오히려 회의적인 측면이 지적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sup>(43)</sup> 이를 특징으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Ⅳ. 사회주의국가헌법의 구조와 그 특징

### 1. 기본원리

#### (1) 정치체제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들을 관류하고 있는 기본적 원리들은 편의상 및 실제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치체제, 경제질서, 사회문화정책, 대외정책의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정치체제에서의 특징적인 원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국가권력의 階級性

레닌은 “헌법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근본법들과 선거 및 대표기관의 권력 등을 지배하는 법률들이 계급투쟁에 있어서 세력들의 실제적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sup>(44)</sup>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헌법은 직접, 공개적으로 국가의 계급적 본질이 勤勞人民의 權力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소 §2, 알 §5, §66, 불 §2, §5, §66, 동 §47, 유 §3, 쿠 §4, 폴 §1, 루 §2, 체 §2, 헝 §2, §9, 몽 §3, 북 §7, 중 §2①). 이렇게 사회주의국가헌법은 국가권력의 계급성, 즉 人民主權主義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발전단계의 하나로서의 사회주의국가와 그 통치원리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리고 통치방식으로서의 소비에트제를 동일한 현상의 각각 다른 면으로 보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는 그 발전단계에 따라 계급적 성격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즉, 사회주의가 완성된 단계에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소련과 같이 그 단계를 넘어선 全人民의 國家, 그리고 그 이전단계에 해당하는 人民民主主義國家가 그것이다.

#### ② 共產黨의 지도적 지위

사회주의국가에서 공산당은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36년 소련헌법이 최초로 그 지위를 규정한 이래 사회주의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동 §1, 알 §2, §3, §10, 불 §1②, 루 §3, 체 §4, §6, 헝 §3, 몽 §82, 유 §321, 쿠 §5, §6, 폴 §3, 북 §4, 중 전문 등).

현재의 소련헌법은 前文에서,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전인민의 전위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중대되었다”고 선언하고, “소련공산당은 소비에트

(41) 위의 논문, 48—49면.

(42) 위의 논문, 49면.

(43) K. Loewenstein, 金美範譯, 現代憲法論(教學社, 1976), 169면. 그는 會議制라는 초민주주의적 형태를 가장한 소비에트 헌법을 의미론적(장식적) 헌법으로 분류한다.

(44) V.I. Lenin, *Collected Works*(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2), Vol. 15, p. 336.



사회의 지도적·향도적 세력(leading and guiding force)이며 그 정치체제와 국가적·사회적 조직의 中核이다……공산당은 사회발전의 일반적 전망과 소련의 국내 및 국외정책의 노선을 결정하고, 소비에트 인민의 위대한 건설적 활동을 지도하며,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소비에트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계획적·체계적·이론적으로 실증되는 성격을 부여한다”(§6)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산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시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회의 ‘지도적 조직’이다.<sup>(45)</sup>

### ③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사회주의국가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특한 정치체제상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 democracy)를 들 수 있다(소 §9, 알 전문, 불 전문, §4, §5, §13, 동 §17, §23, 유 전문, 쿠 §68, 몽 §2, 폴 §7, 루 §27, §73, 체 법률 §2, 북 §50, 중 전문). 이는 ‘근로자를 위한,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한 레닌과 스탈린의 말로부터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내립하는 계급이 존재하는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는 결국 가진 소수자를 위한 민주주의에 불과함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소비에트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등의 용어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통칭되어 오고 있다.

소련헌법은 소비에트사회의 정치체제의 발전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한층 더 깊은 전개라고 하면서(§9) 계속하여 국가기관의 끊임없는 개선, 사회단체의 활동력의 향상, 인민통제제도의 강화, 국가 및 사회생활의 법적 기초의 공고화, 공개제의 대폭 확대, 여론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원리는, 권력실현의 메카니즘으로서의 ‘소비에트제’와 參政權 등 일련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인민의 국가적·사회적 사무의 관리에 있어서의 광범한 참여’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④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민주적 중앙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sm)는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리이다(소 §3, 알 §11, 불 §5, 동 §47, 쿠 §66, 몽 §5, 체 §11, §18, 북 §9, 중 §3①). 이 원리는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黨組織의 발전과 조직적 강화를 위하여 레닌이 제창한 黨의 조직원리로부터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리로 발전한 것이다.

소련헌법은 이를 “소비에트국가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원칙, 즉 최하급으로부터 최상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이 기관들의 인민에 대한 보고의무, 상급기관의 결정에 대한 하급기관의 준수의무에 따라 행하여진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지방의 창의회 및 창조적 활동 그리고 위임된 업무에 대한 각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책임을 중앙의 지도와 결합시킨다”(§3)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는 권력통합의 원리로 이해된다. 즉, 소비에트는 인민의 一般意思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국가최고권력기관이며, 집행기관인 閣僚會議은 이에 의하여 구성되고,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지니므로써 종속적 지위에 있게 된다. 이리하여 국가권력은 소비에트에 집중되며 이 소비에트체제의 최정상인 연방최고소비에트에 집중된다.

이 원리는 상부의 지시와 하부의 창의성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은 민주주의요소보다 중앙집권주의의 요소가 보다 결정적인 것이다.<sup>(46)</sup>

### ⑤ 社會主義的 適法性 원리

사회주의적 적법성(socialist legality)의 원리(소 §4, 알 §96, §101, 불 §5, §8, §114, §125, §133, 루 §19, §70, §74, §81, §97, 쿠 §9, §123, 루 §13, 체 §17, §106 a)란 스트로고비치(S. M. Strogovich)에 의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회주의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에 의한 소비에트 법의 엄격하고 단호한 준수와 이행”<sup>(47)</sup>이라고 정의되는데, 자본주의국가의 法治主義 원리에 해당된다. 이

(45) J. N. Hazard, “A Constitution for ‘Developed Socialism’,” D. D. Barry, et al., eds., *op. cit.*, p. 12.

(46) M. Fainsod, 金俊輝譯, 蘇聯統治史(南法社, 1981), 245면; B. Meissner, “Die neue Bundesverfassung der UdSSR,” *JBR*, Bd. 27(1978), S. 361.

(47) F. J. M. Feldbrugge, ed., *Encyclopedia of Soviet Law*, Vol. II (Dobbs Ferry, N. Y.: Oceana Publications/Leiden: Sijthoff, 1973), p. 619.

원리는 소련사회가 혁명 이후 NEP 시기(1921—1928)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자 법과 질서의 회복이라는 요구에 상응하여, 초기의 革命原理에 대치된 원리로서 혁명원리와 適法性原理가 결합된 원리이다.

소련헌법은 “소비에트국가와 그 모든 기관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입각하여 활동하고, 법질서, 사회의 이익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무원은 소련헌법과 소비에트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4)라고 규정하고, 이들에게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의무 (§57)를, 시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의 준수 및 사회주의적 공동생활규칙의 존중의무 (§59)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없지 않지만 모든 당기관도 헌법의 범위내에서 활동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6).

## (2) 경제질서

경제질서에 관한 것이야말로 사회주의국가의 헌법과 자본주의국가의 헌법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국가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생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들이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그 전반부에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국가헌법에 있어서 경제질서의 기본적 특징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적 소유제이다.

중앙의 통일적 경제계획의 원리는 정치적·경제적 합목적성이라는 근거에서만 아니라 소비에트의 국가와 법이론의 근거에서도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본질적·필연적 특징이다.<sup>(48)</sup> 自主管理社會主義 또는 시장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가 특이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동구권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따르고 있다(소 §16, §73, §131, 알 §25, §67, §81, §93, 불 §3, §22, §78, §95, §103, §114, 동 §9, §12, §41, §76, 유 §257, §281, 쿠 §8, §16, 몽 §§14—17, 폴 §11, §24, 루 §13, 체 §7, §13, §90, 법률 §4, §10, 헝 §7, 중 §15).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기초로서 社會主義的 所有는 國有와 公有의 두 형태가 있다. 소련헌법은 이를 국가(전인민) 소유와 협동조합의 소유, 노동조합과 기타 사회단체의 소유<sup>(49)</sup>의 3가지 형태를 들고 있다. (§10—§13).

이밖에 사회주의국가헌법에서는 노동이 시민의 권리이자 신성한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다(소 §40, §60, 북 §56, 중 §42 등). 또 노동과 분배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다”(소련헌법 §14)는 사회주의 원칙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리고 소련헌법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향상율도모하기 위하여 물질적 인센티브의 규정이 특이하며,<sup>(50)</sup>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헌법에서는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소 §18, §67, 동 §15, 알 §20, 유 §87, §§19 2—3, §281, 쿠 §27, 폴 §12, §71, 체 §15, 헝 §57, 중 §26).<sup>(51)</sup>

## (3) 사회·문화정책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도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소 §§19—27, 알 §§32—37, 동 §18, 쿠 §38, 체 §16, 헝 §18, 북 §§35—48, 중 전문, §§19—22).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든지 개별조항에 규정하든지 관계없이 이들 사회·문화에 관한 조항들은 프로그램적, 선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sup>(52)</sup>

소련헌법은 ‘사회발전과 문화’라는 표제 아래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동질성의 강화, 다른 한편으로는 人格의 발전과 전개라는 두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19—27). 소련헌법이 발전된 사회주의에 있어서 인민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인 소비에트 인민의 형성(前文), 민족과 국민의 발전과 ‘접근’을 통한 사회적 동

(48) W. Meder, “Theoretische Probleme des Sowjetsozialismus,” *JöR*, Bd. 21(1972), S. 138.

(49) 노동조합 및 기타 사회단체의 소유를 사회주의적 소유의 세번째 형태로 도입한 것은 1961년 소련헌법에서였다. 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B. Meissner, a. a. O., S. 371.

(50) 중공은 1978년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 (§10)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삭제하였고 북한헌법에는 아직 규정되지 않고 있다.

(51) 북한헌법에는 이 규정이 없다.

(52) R. Sharlet, *op. cit.*, p. 14; B. Meissner, a. a. O., S. 375; G. Ginsburgs, et al., “A Profile of the Soviet Constitution of 1977,” F. J. M. Feldbrugge, ed., 앞의 주 (3), p. 35.

원성의 강화(§19)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독헌법(§18)이나 북한헌법(§35)은 '社會主義的 民族文化', 중공헌법(전문)은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색채를 나타내고 있다.

#### (4) 대외정책

사회주의국가헌법은 對外政策에 관하여 새로운 원리인 平和共存 및 社會主義的 國際主義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본적 특징이 있다.<sup>(53)</sup> 그러나 이들 규정은 사실상 강제력이 약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화공존의 원칙은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사회주의혁명-세계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가 공존하는 것은 일정기간 불가피하다는 레닌의 인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련헌법은 1977년에 처음 대외정책조항을 신설하여 평화공존 원칙을 규정하였다(§§28-29, 이밖에 알 §15, 동 §6, 유 전문, 몽 전문, 중 전문, 폴 §6).

이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가 궁극적으로 세계혁명을 지향하고 있는 한, 장기간의 휴전 내지 시한부 평화로 이해될 뿐 궁극적 평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확보'(소련헌법 §28)할 때까지, 즉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이 확보될 때까지만 유효한 원칙이다.<sup>(54)</sup>

평화공존이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임에 반하여, 사회주의 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원칙은 사회주의국가 상호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다(소 §30, §36, 불 §5, 동 §6, §25, 유 전문, 루 §14). 이 원칙은 초기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sup>(55)</sup>라고 하여 국제노동운동의 원칙으로 발전해온 것이다.<sup>(56)</sup> 이 원칙의 내용으로 소련헌법은 우호, 협력, 同志의 相互援助를 들고 있다(§30). 이 중에서 동지적 상호원조의 원칙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및 그밖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한다.<sup>(57)</sup> 이리하여 동지적 상호원조의 원칙은 소련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감행한 무력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사회주의체제의 옹호를 위하여는 군사적 원조제공을 통한 내정간섭도 가능하다는 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수용을 예견하고 있다.<sup>(58)</sup>

## 2. 基本權의 구조

### (1) 基本權의 개념

사회주의국가헌법에서의 기본권 개념은 자본주의국가헌법의 그것에 비하여 특이한 이론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적 기본권 개념이 최초로 표현된 헌법은 1918년의 RSFSR 헌법에서이지만, 여기에서의 기본권조항은 제3차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에서 채택된 '근로하고 착취당하는 인민의 권리선언'(1918.1.7)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다. 소련의 1924년 헌법에서는 기본권조항이 없어졌다가 1936년 헌법에 다시 규정되는데, 이 헌법에서 사회주의국가헌법의 기본권조항의 특징적인 요소가 대부분 드러나게 된다. 그 이후 최근까지 동구권 국가들의 헌법에서는 기본권규정이 더욱 확대되고 헌법상 격상된 지위를 차지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1965년의 루마니아헌법은 과거에는 헌법 뒷부분에 위치하였던 기본권조항을 제2편에 규정하였고 1977년의 소련헌법도 제2편에, 중공의 신헌법에서도 제2장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헌법들이 자본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를 형성해가는 데에 중점을 둔 결과, 사회구조와 국가구조 및 국가기관의 편성을 헌법의 앞부분에 규정하였던 데 비하여, 사회주의사회가 최종적이며 완전히 승리하여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당면과제로 된 시기에는, 동독헌법에서처럼(§21), 그것을 공동의 과제로 하는 시점에서 개인이 사회와 국가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59)</sup>

(53) V. Chirkin, *op. cit.*, p.283. 이들 원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金容九, 蘇聯國際法理論에 있어서의 平和共存原則과 社會主義的 國際主義原則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논문(1979) 참조.

(54) B. Meissner, *a. a. O.*, S.379.

(55) 알 §15, 루 §11, 몽 §89, 북 §16, 제 법률 전문은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56) 金容九, 앞의 논문, 142-143면.

(57) 위의 논문, 145면.

(58) R. Sharlet, *op. cit.*, p.14; G. Ginsburgs, et al., *art. cit.*, p.40; B. Meissner, *a. a. O.*, S.380.

(59) 新美治一, 앞의 논문, 57-58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人間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사회와 역사와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까닭에, 그 自由에 대한 개념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의 자유'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국가적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존재의의를 가지는 '국가에로의 자유'를 뜻하며, 平等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해소된 상태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에서 시작되고, 개인적·정치적 평등도 이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진다.<sup>(60)</sup> 그러므로 기본권은 천부불가양의 권리(자연권)가 아니라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법률적 보장(실정권)이라고 이해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핵심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sup>(61)</sup> 그러한 한, 기본권은 항상 국가내적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 또는 사회가 개인보다 우위에 있으며, 개인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충돌될 때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국가의 침해와 간섭으로부터의 배제를 본질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부터 성질상 국가내적 보장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본권(사회경제적 권리)에 그 중점이 옮겨진다.<sup>(62)</sup>

## (2) 기본권조항의 特徵

위와 같은 기본권 개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첫째, 권리의 실질적 보장 추구. 사회주의 국가헌법이 국가에로의 자유를 중시함에 따라, 기본권을 예시, 선언함에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 실현방법까지 규정하는 데에 기본권조항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한다.<sup>(63)</sup> 이 특징은 기본권조항의 구조에서 드러난다.<sup>(64)</sup> 기본권조항의 전단에서는 권리를 제시하고, 후단에서는 그 보장을 규정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이다. 후단에서 권리의 '실질적 기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전단에서 제시된 일반적 원칙을 부연설명하는 더욱 상세하고 세분된 내용의 권리들이 규정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조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結合. 소련헌법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시민의 의무의 이행과 분리될 수 없다" (§ 59)고 하여 권리와 의무의 결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의무를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때에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65)</sup> 소련헌법에서 지금은 사라진 1936년 헌법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한다" (§ 12)는 규정도 이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규정이다.

셋째, 권리·의무 주체의 階級性. 이는 헌법의 계급적 성격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특징이다. 1918년의 소련헌법에서는 노동자와 농민프롤레타리아트만이 권리의 주체이며 착취자계급은 의무만의 주체였다. 노동의 의무 (§ 18)는 양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으나, 무장병역의 명예로운 의무는 전자만이 부담하고, 후자는 비무장병역의무만을 부담하였다 (§ 19).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에서 계급대립이 없어진 결과 현행 헌법에는 이러한 기본권 항유주체에 관한 차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勤勞人民만이 권리의 주체임은 사회주의 국가헌법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네째, 기본권의 相對化.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은 국가내적 실정권으로 이해되므로, 기본권의 절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의 이름으로 추구되는 정책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유보에 의하여 모든 기본권은 상대화하게 된다.<sup>(66)</sup>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기준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의 이익' (1918년 소련헌법 § 23)이라는 일반적 헌법유보라든가, 현행 소련헌법의 권리와 의무의 결합 (§ 59), 사회와 국가의 이익 및 다른 사람의 권리 (§ 39),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 (§ 47, § 51), 인민의 이익 (§ 50)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유보사항의 구체적 내용, 즉 무엇이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기관은 黨이라고 한다. 결국 기본권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의 일치는 黨의 노선과의 일치를 의미한다.<sup>(67)</sup>

(60) 韓維吉, 앞의 책, 227—229면 참조.

(61) B. Meissner, a. a. O., S. 389.

(62) a. a. O., S. 390.

(63) V. Chirkin, *op. cit.*, p. 238.

(64) G. Brunner, *Die Grundrechte im Sowjetsystem*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63), S. 12, S. 16; G. Ginsburgs, et al., *art. cit.*, p. 46.

(65) G. Brunner, a. a. O., S. 12.

(66) B. Meissner, a. a. O., S. 391.

(67) a. a. O., S. 391; G. Brunner, a. a. O., S. 17.

### 3. 統治構造

#### (1)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형태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구조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소비에트제도일 것이다. 뢰벤슈타인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형태를 會議制로 분류하면서 이 정부형태의 통치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입법의회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선거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부는 의회에 종속되어 있다.<sup>(68)</sup> 그 작업모형은 철두철미 극단적인 민주주의적이고 극단적인 공화주의적이며 '1원적'인 루소 자신의 사상임에 틀림이 없고, 유일한 권력보유자로서의 민선의회에 권력을 집중시킨다고 한다.<sup>(69)</sup>

원래 소비에트라는 러시아어는 協議會, 評議會를 나타내는 말로서, 1905년의 혁명 초기에 어느 공장의 노동자집단의 행동조직으로 처음 나타났다가, 그 지역 공공문제의 처리까지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는 1871년 프랑스 제2제정 말기에 나타나서 입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파리 코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를 "의회와는 달리 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집행하는 활동기관으로, 이야말로 드디어 발견된 노동자집단의 정치형태"라고 찬사를 발했으며, 레닌은 이를 러시아에 응용하여 소비에트를 통치기구로 확립시키면서, 이 소비에트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70)</sup> 스탈린도 이 소비에트를 "오랫동안 추구하여 결국 발견한 정치형태이며, 파리 코뮌이 그 형태의 맹아였다. 소비에트권력은 그 발전이며 완성이다"라고 평가하였다.<sup>(71)</sup> 오늘날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이를 국가의 정치적 기초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2)</sup>

#### (2) 통치형태의 特徵

소비에트형 통치형태의 특징은 權力統合主義와 民主的 中央集權主義이다. 레닌에 의하면 권력분립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인민에 대하여 자의적 권력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실제로는 집행권의 우월에 대하여 의회의 통제나 법률의 우위 등이 유명무실하여진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소비에트질서는 노동자의 권력일체성의 원리, 즉 오직 하나의 노동자의 권력이라는 유일한 일반의사에 의하여 관철되어 있다고 한다.<sup>(73)</sup>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헌법에 나타난 입법, 집행, 사법의 분립은 권력의 분립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의 분배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소비에트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원리인 민주적 중앙집권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원리에 의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하급기관의 복종, 소비에트에 대한 집행기관의 복종이라는 관계가 확립되어 최종적으로 최고소비에트에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실현의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요소는 주권자인 인민과 그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인민은 스스로 최고권력기관인 소비에트를 구성하고, 그 기관의 활동에 참여한다. 대의기관인 소비에트는 항상 정확히 전인민의 의사에 기하여 활동하고, 그 의사를 국가규범으로 제정하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sup>(74)</sup> 이를 위하여 대의원은 국가 및 각종 사회단체의 회합에 참여,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예컨대 소련헌법 § 105, 동독헌법 § 58). 이들 대의원과 선거민과의 관계는 강제위임(mandat imperatif) 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대의원에 대하여는 소환제도(소 § 107, 동 § 57②, 유 § 291, 쿠 § 83, 몽 § 6, 폴 § 2, § 102, 루 § 25, 헝 § 71, § 73, 체 § 3, § 86, 중 § 77)가 적용된다.

(68) K. Loewenstein, 金笑範譯, 앞의 책, 90면.

(69) 위의 책, 91면.

(70) 佐藤功, 앞의 책, 236면.

(71) 위의 책, 233면.

(72) 뢰벤슈타인에 의하면, 회외제는 쌍면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민주제와 전제제 양방에 대하여 조직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회외제가 '하나의 전제주의정부가 안주할 수 있는 철두철미하게 민주주의적인 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며, 회외제가 전제주의 통치형태로 변천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생물학적 법칙이라고 한다. K. Loewenstein, 金笑範譯, 앞의 책, 91—93면.

(73) 佐藤功, 앞의 책, 250—251면.

(74) 新美治一, 앞의 논문, 56면 참조.

#### 4. 헌법의 制定, 改正 및 保障

##### (1) 헌법의 制定과 改正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도 자본주의국가의 그것과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헌법이 사회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없을 때 그 새로운 사회의 단계에 상응하는 헌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새 헌법의 필요성이 일단 인정되면 준비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때 헌법개정의 제안권은 형식적으로 국가최고권력기관에게 부여되어 있다(소 § 108, 동 § 63, 알 § 67, 불 § 78, 유 § 398, 쿠 § 141, 폴 § 106, 루 § 43, 헝 § 24, 체 법률 § 41, 북 § 76, 중 § 64①). 국가최고권력기관은 특별한 헌법위원회를 임명하여 초안의 기초작업을 담당하게 한다. 이 위원회는 보통 최고권력기관 대의원과 각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이 작성한 초안은 먼저 공산당의 중앙기관 또는 당 및 대중적 사회단체의 중앙기관에서 토의된 후 전국적인 토론에 회부된다.

전국적 토론에 회부시킨다는 바로 이점이 사회주의국가헌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다. 이때 신문과 방송이 총동원되어 초안에 대한 해설을 보도한다. 토론은 몇개월에 걸쳐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각종 사회단체나 지역회의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토론을 하기도 하고, 시민이 직접 신문, 잡지의 편집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한다. 보고에 의하면 대단히 많은 토론과 제안이 이루어진다. 소련의 1977년 헌법의 제정시에는 4개월간, 전체 성인인구의 5분의 4 이상인 1억4천만명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40만건 이상의 제안이 제출되어 그 결과 헌법위원회가 초안의 173개 조항 중 110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1개의 새 조항을 추가하였다.<sup>(75)</sup>

전국적 토론을 거쳐 헌법위원회가 수정한 초안은 국가최고권력기관인 대의기관에 의결된다. 여기서 심의되는 초안은 대의원에 의해서 수정도 가능하며,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초안은 투표로써 결정된다. 표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된 다수결에 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소 § 174, 동 § 63②, 알 § 111, 불 § 143③, 헝 § 24③, 루 § 56, 유 § 401, 쿠 § 141, 북 § 82, 중 § 64① 등, 폴 § 106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체 연방에 관한 헌법적 법률 § 41은 재적대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은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의결로 신헌법은 채택되지만, 이후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는 경우도 있다(쿠 § 141).<sup>(76)</sup>

이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헌법제정 또는 개정의 과정에서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전국적 토론이라는 절차가 중요시되는데, 이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민의 국가적 사회적 사무의 관리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참여권의 보장이라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한 구현형태로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공산당이다. 헌법위원회가 기초하는 헌법초안은 공산당대회 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것이며, 일단 작성된 초안도 공산당에 먼저 보고되어 토론되는 것이 상례이다.<sup>(77)</sup>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는 이처럼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도 확립될 수 있다.

##### (2) 헌법의 保障

헌법보장제도는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회주의국가의 헌법보장제도의 특징으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헌법보장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헌법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違憲法令審査制度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헌적인 법령의 심사를 독립된 중립기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

(75) 이밖에 동독의 1968년 헌법 초안에 대하여는 총인구 1,710만명 중 1,100만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헌법 전문과 55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1980년, 베트남헌법의 제정시에는 성인인구의 대다수인 2천만명이 초안의 토론에 참여하여 그 결과 147개 조항 중 140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1971년 불가리아헌법개정 및 1976년 쿠바헌법개정시에도 이와 비슷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76) 1968년 동독헌법과 1971년 불가리아헌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77) V. Chirkin, *op. cit.*, p.239. 소련의 경우, 헌법 헌법에 반영된 국가와 사회에 관한 이론들은 1961년 제22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된 제3당강령의 그것들을 법제화한 것이다. 헌법 소련헌법의 기초를 위한 헌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브레즈네프도 헌법초안을 작성하여 전국적 토론에 회부하기 전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신헌법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다.

도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부인하여 왔다. 국가최고권력기관, 즉 입법부에서 제정한 헌법과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으며, 국가권력의 통한 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최고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다른 어떤 기관이 심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의 보장을 위해서, 첫째,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의 헌법준수의무와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소 § 4, § 59, 루 § 39, 유 § 205, 동 § 89, 체 § 34 및 법률 § 142)과, 둘째, 이에 대한 감독과 보장책임을 국가최고권력기관 또는 이 기관이 선출하고 이 기관의 필수적 구성부분인 그 간부회나 국가위원회(소 § 121⑤)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권을 연방최고소비에트 간부회에 부여하고 있다) 또는 최고권력기관이 선출하는 상설 사법 또는 헌법위원회(루 § 53는 헌법위원회에, 동 § 74①은 국가평의회에 법령의 합헌성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에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sup>(78)</sup>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주의국가의 위헌심사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동구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는 헌법법원을 설치하여 법령의 합헌성심사를 맡기고 있으며(유 § 92, § 205, §§ 375—396, 체 법률 §§ 86—101), 폴란드도 1982년에 법률로써 헌법법원을 창설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결정하도록 하였고(단, 최고국가기관인 Sejm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헝가리는 1984년부터 독립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위헌법령심사제도를 가리켜 그 법적 정치적 평가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하더라도 본질상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법적 감독기관이 보통 우익세력의 손안에 있는 한 그 제도는 민주적 변화를 제약할 수 있는 부르조아의 부가적 도구이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그것은 사회주의적 적법성 원리를 공고화하기 위한 부가적 수단이라고 하여 과거의 이론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sup>(79)</sup>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헌법법원이나 헌법위원회 등이 대부분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입법부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독립적 중립적인 기관이 아닌 최고권력기관 스스로가 위한다는 점이 이들의 헌법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80)</sup>

## V. 맺 는 말

지금까지 사회주의국가헌법이 가지고 있는 特徴的 要素와 그 본질적 내용을 나름대로 이해해보고자 하였으나, 우선 사회주의국가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으로서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이념성, 최고규범성, 규율대상의 광범성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이론 및 그 변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헌법이론을 살펴보았다.

사회주의국가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은 자본주의국가헌법과 그것을 뚜렷이 구별하여 주는 특징적 요소이며 다른 모든 요소 속을 관류하는 기본적 요소이다. 최고규범성과 규율대상의 광범성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로 접어들어 단계에서 새로이 또는 더욱 강조되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들이 나름대로 憲法審査制度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소련이나 북한의 경우에는 헌법심사제도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더욱 의문이다. 헌법은 직접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는 특징을 들고 있는 연구자도 있었지만, 설사 헌법에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동 § 105) 그것이 헌법의 법적 실효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그것을 담지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적 규정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 소를 특징에서 제외하였다.

78) Ibid., pp. 19—20, pp. 240—241 참조.

79) Ibid., p. 20.

80) 新美治一, 앞의 논문, 48면.

사회주의국가헌법을 편별에 따라 나누어서 그 각각의 특징적 요소를 지적한 것은 하나하나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떤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 하였던 것이었지만, 대부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사회주의국가헌법이 자본주의국가헌법과 다른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그 규율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국가권력의 본질을 계급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셋째, 경제질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국가 및 공공생활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권력이 소비에트에 집중되는 권력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곱째, 기본권은 실질적 보장을 강조하는 사회경제적 기본권에 중점이 놓여 있다.

사회주의국가헌법은 구조나 체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국가헌법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국가헌법과 전혀 다른 원리와 이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전체제에 걸쳐 관류하는 요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 소론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주의국가헌법 전반에 걸쳐 특징적 요소를 망라해 보려 하였던 목적이 앞서 하나하나의 특징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내용이 없었음을 고백해야만 하겠다. 추후에 보다 상세한 연구로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참 고 문 헌

- Berman, H., *Justice in the USSR*, rev. ed., enlarged, New York: Random House, 1963
- Brunner, G., *Die Grundrechte im Sowjetsystem*,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63
- Chirkin, V.,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Institution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5
- Cohen, L. J. and J. P.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 Y.: Anchor, 1974
- Feldbrugge, F. J. M., *The Constitutions of the USSR and the Union Republics*,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ordhoff, 1979
- Kelly, D. R.,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nev Era*, New York: Praeger, 1980
- Sharlet, R., *The New Soviet Constitution of 1977*, Brunswick: King's Court Communications, 1978
- Unger, A. R.,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USSR*, London: Methuen, 1981
- Berman, H., "What makes 'Socialist Law' Socialist?," *Problems of Communism*, Sep.-Oct. 1971
- Lammich, S., "Neue Institutionen im Verfassungsrecht der sozialistischen Länder Osteuropas," *AöR*, Bd. 102, Heft 3, 1977
- Meissner, B., "Die neue Bundesverfassung der UdSSR," *JöR*, Bd. 27, 1978
- トボルニン著, 畑中和夫監譯, ソビエト憲法論, 京都: 法律文化社, 1980
- 佐藤功, 比較政治制度,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6.
- 社會主義法研究會編, 現代社會主義憲法論, 京都: 法律文化社, 1977